

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개발사업 프로세스 전환

先 지역합의 유도,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환경계획과의 연계강화

과잉개발 예방

개발사업 평가제 도입 검토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제도 통·폐합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난개발 방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14종 국가공간정보 추가 공개(부동산, 교통 등)
서비스 확대(웹→모바일)
오픈플랫폼 서비스 강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



실내공간정보·지적재조사사업

실내공간정보 맵 구축, 실내공간정보 활용서비스 개발('14년~'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소 (전국토의 1/7)



전문인력양성·R&D

기업체 실무연수 도입, 고용연계 아카데미 운영
창업박람회,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13.11)
국토정보R&D프로젝트 추진('14년~'20년)

공간정보의 융복합

공간 빅데이터 구축('14년~'17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플랫폼 도입('13년~'14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탈루세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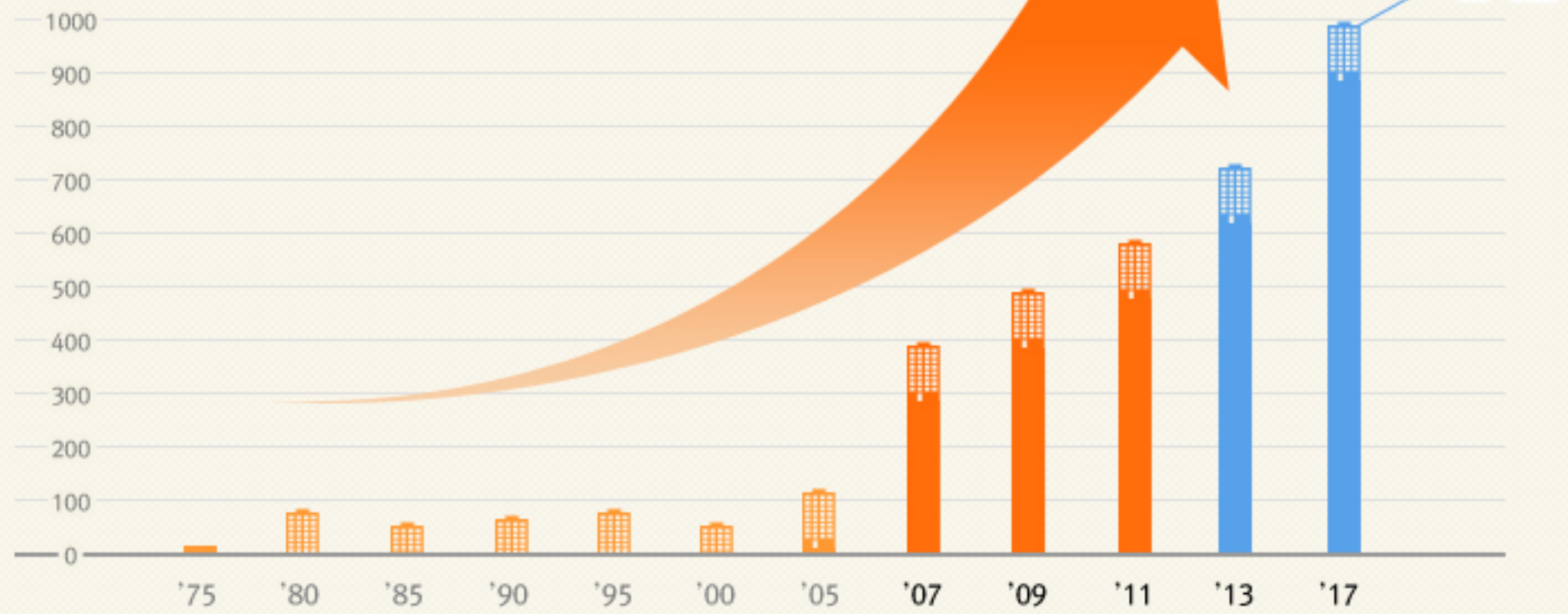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4.6만명의 일자리 창출

해외건설을 경제부흥 핵심동력으로 육성



2017년 1천억불 수주, 건설 5대 강국 진입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진출 시장 및 분야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주 기반 확보

신시장 개척지원 확대, 개도국 진출 활성화 방안 수립
플랜트 위주에서 도시, 수자원 등 강점분야로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투자과 수주를 겸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펀드 지원 확대
R&D 로드맵 수립
해외건설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건설ENG 진출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컨설팅 강화
(상담인력 39→ 50인)



공사이행보증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3천→ 3.5천명)
및 해외건설 OJT 규모 확대
(200→400명)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3대 운전 악습 개선 (음주운전, 운전 중 DMB시청, 안전띠 미착용)

- 교통안전 민·관 협의체 운영
- 국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시민 파트를 구성
- 교통안전 시범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참여유도



- 2017년까지 위험도로 560곳 개선
- 졸음쉼터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
- 첨단 도로안전체계 도입 (2014년 시범사업)

- 자동차 정비용부품 인증제도의 도입·시행
- CNG버스 재검사 내실화를 통한 서민교통 안전확보
- 차선이탈경고장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 장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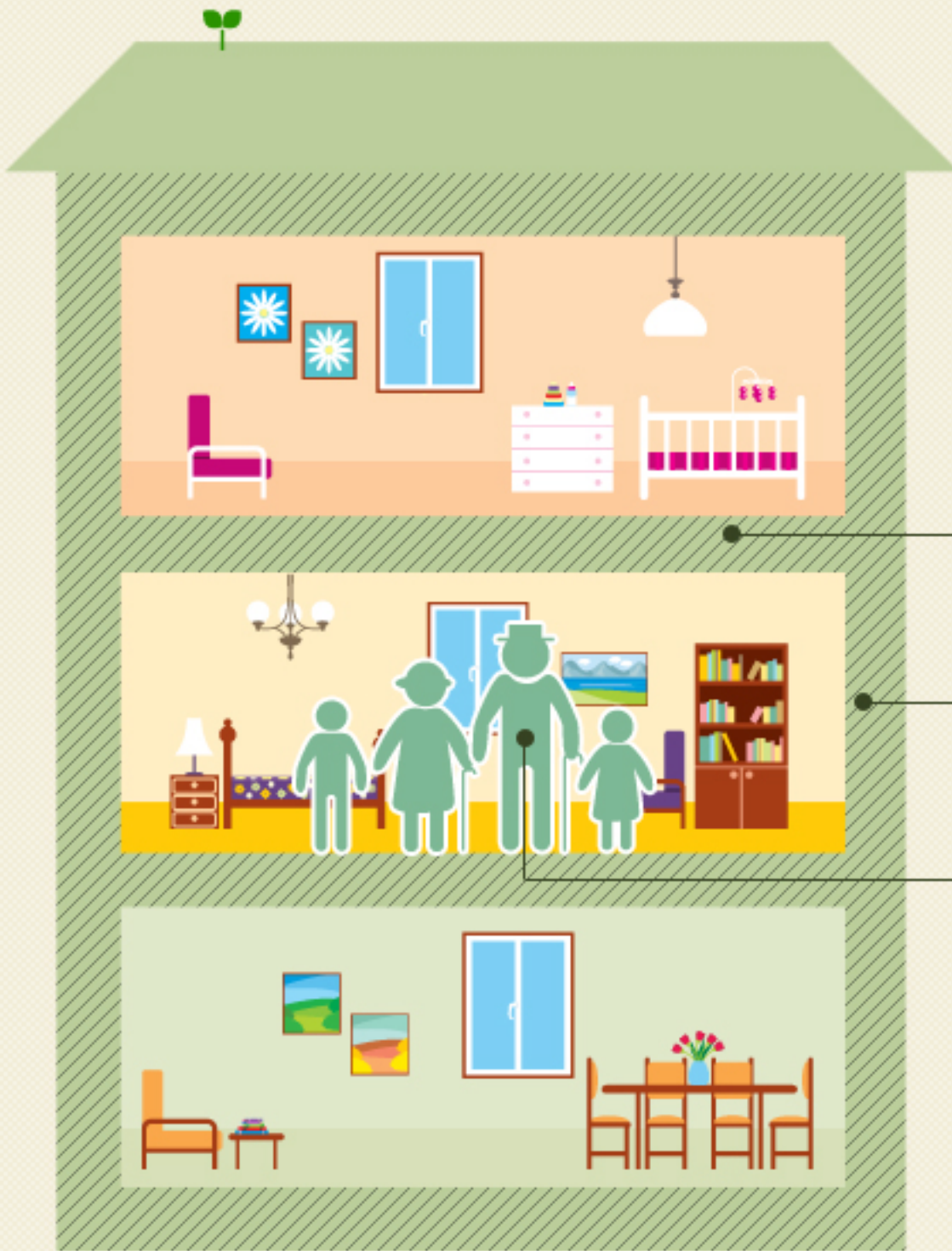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도 향상

- 교육 -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2017년까지 10만명)
- 과학적 관리 - 운행기록을 활용한 과학적 안전관리
- 점검 -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

교통사고 30% 감축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11년 2.4명 → '17년 1.6명)

안전한 주거생활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 바닥구조 건설기준강화(13.5)
- 입주민간 지켜야 할 생활수칙 보급(13.12)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

-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 확대(13.5)
-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 강화(13.9)

노약자 등이 살기 안전한 아파트

- 실내설계가이드라인 마련(13.12)

안전한 교통생활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강화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스티렌)
자동차 등록·이전 불편 민원 해소

경제적·친환경 운전방식인
에코드라이브 확산을 통해 체험교육,
경제운전 경진대회, 가상체험관 운영



교통약자(전 국민의 24.5%)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900대)
및 장애인 콜택시(250) 추가 보급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 전면시행
(13.12, 항공법 개정)
교통약자에게 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Fast Track) 제공(13.11)

출퇴근 교통난 해소

도시혼잡도로 개선

도로의 확장·신설 중심에서 병목구간, 시설개선 등 도심혼잡 해소에 중점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서울7호선 석남 연장, 서울9호선 2단계, 대구3호선 건설 등 대도시 도시철도망 지속 확충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교통수단 개발, 상용화 추진

출퇴근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육성 교통수요 관리강화



대중교통 육성

복합환승센터 사업 본격 추진
광역급행버스와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수도권 정기이용권버스 운행 확대

교통수요 관리강화

주차장 상한제 합리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승용차 공유이용 활성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민간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건설업자에게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청구권 부여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지원

대기업이 소규모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강화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가능한
건설 대가산정기준 마련



물류산업 선진화



전문물류기업(제3자물류)을 속속 키우는 경영환경 만들기

- 전문물류기업 이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컨설팅 비용을 지원(50%이내)
- 대기업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일하기 좋은 화물운송시장 만들기

- 영세화물운전자 통행료 할인방안 마련
- 화주, 물류기업이 상생하는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
- 사업용자동차 검사수수료 절감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시행

물류시설의 기능 활성화

- 물류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시설 입주를 허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공급 조절

공공분양주택의 대량공급 계획 축소 → 수급조절기능 강화
착공시기 탄력 조정 등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유효수요 창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생애최초구입자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상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하우스푸어: 프리워크아웃, 담보대출채권 및 지분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렌트푸어: 목돈 안드는 전세,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 확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연 13만호 공급
행복주택은 철도부지·국공유지 등
도심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급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 확대

주택바우처 도입

저소득 월세가구의 월임대료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
'14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
'14년 하반기 본격 도입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거점으로 활용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550만 가구에 주거서비스 지원